

# 상호관세 위헌판결, 트럼프의 ‘Plan B’ 5가지 카드

대법원의 제동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봉인 해제된 무역법의 무기고를 분석합니다.



# 위헌 판결의 실체: ‘라벨’만 바꿔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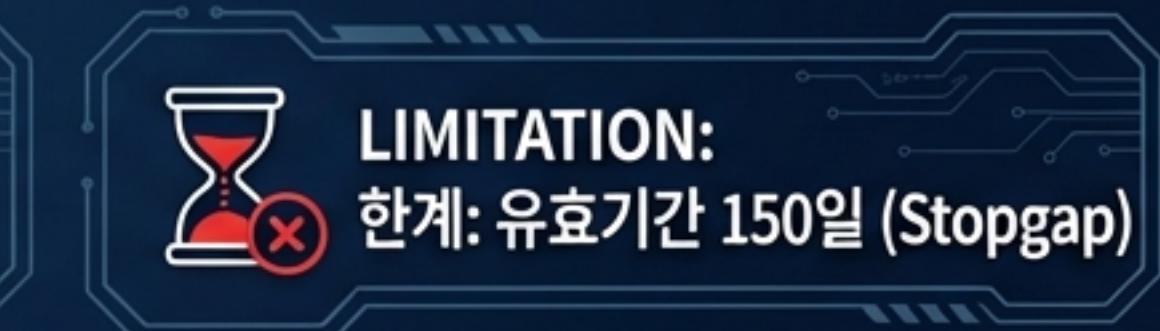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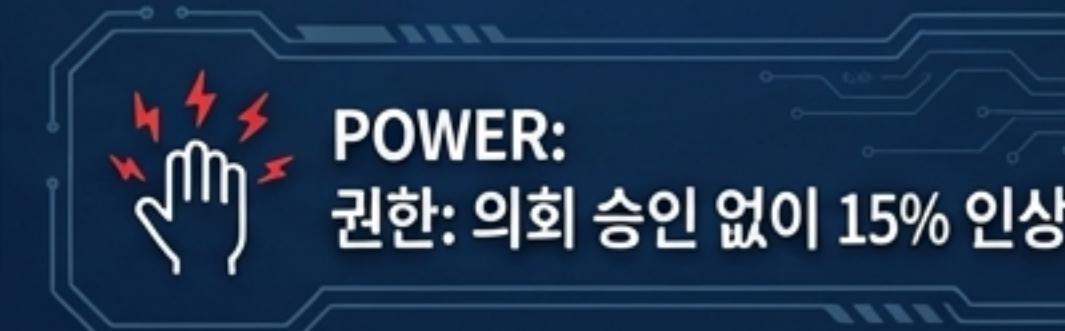
Plan B

**The Reality:** 기존 관세 유효  
법적 근거(Label)만 교체하면  
관세는 유지됩니다.  
10%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The Loss:** 소급 적용 불가

판결은 하급심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년간의 소송이 예상됩니다.

# 첫 번째 대응: 무역법 122조 (긴급조치)



**ANALYSIS:** 트럼프는 즉시 122조를 발동해 10%를 15%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입니다.

# 트럼프의 무기고: 5가지 법안의 위력과 속도



무역법 122조

속도



High

위력



Low

지속



Already Deplo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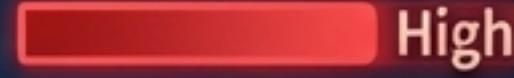
무역확장법 232조

속도



Medium

위력



High

지속



National Security



무역법 301조

속도



Low

위력



High

지속



Unfair Trade



무역법 201조

속도



Low

위력



Medium

지속



Safeguard



관세법 338조

속도



High

위력



Max

지속



The Nuclear Option

# 카드 #1: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지명자):  
라이트하이저의 후계자로,  
이 법안을 적극 활용할 인물입니다.

철강 수입  
급증

국내 철강사  
위기

무기 제조  
차질

국가 안보  
위협

관세  
정당화

# 카드 #2 & #3: 전통적 수단 (301조 & 201조)의 한계



## 슈퍼 301조 (불공정 무역)

강력하지만 조사와 청문회에 **최소 1년이 소요됩니다.**

## 세이프가드 (산업 피해)

특정 산업(예: 세탁기)에 국한되며 ITC 조사가 필수입니다.

⚠️ Verdict: 트럼프는 당장의 '보복'을 원합니다. 이 도구들은 너무 느립니다.

# 카드 #5: 관세법 338조, 봉인 해제된 핵무기

- Trigger: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  
확인 시 즉시 발동
- Power: 기한 제한 없음.  
최대 50% 관세 또는 수입 금지
- Authority: 의회 승인 불필요  
(No Congress)

"의회나 법원이 막는다면, 우리는 338조를 사용할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 1930년의 유령: 스무트-홀리법의 귀환

338조는 대공황을 심화시킨 ‘스무트-홀리법’의 유산입니다.

Impact: 1930~1933년 글로벌 무역량 66% 감소

Result: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 전쟁 촉발

Global Trade Volume (1929-1933)

SMOOT-HAWLEY ACT

1929

1930

1931

1932

1933

지난 100년간 이 법이 봉인되었던 이유는 그 파괴력 때문입니다.

# 왜 하필 338조인가?



**세계관 일치:** ‘미국이 차별받고 있다(Victim)’는 트럼프의 명분과 완벽히 부합합니다.

**속도:** 청문회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즉시 발동 가능합니다.

**협상력:** WTO 이전의 법안으로,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힘의 논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트럼프의 칵테일 전략



+



+



=



**Base (Speed):**  
15% 관세로 시간 벌기

**Body (Security):**  
안보 논리로 기본 관세 부과

**Kick (Punishment):**  
저항하는 국가에 50% 보복



## The Cocktail Strategy

위헌 판결을 우회하여 실질적인 ‘상호 관세’ 효과를 달성합니다.

# WTO와의 충돌? ‘알빠노’



**Conflict:** 338조는 WTO의 ‘비차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Trump's Stance:** 트럼프에게 WTO 제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탈퇴도 불사할 것입니다.

**Outlook:** 국제 통상 질서가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 결론: 15%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 1. 대법원 판결은 관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 2. ‘상호 관세’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338조(차별 대응)’가 새로운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 3. 트럼프 행정부는 5가지 카드를 정교하게 섞어 쓰며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